영암 헬기사고·향일암 화재·H수련회원장 살인미수…

결국 못 밝히고 해 넘긴다

동사무소 연쇄 절도 사건 등도 '오리무중'

올해 광주·전남에서는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았다. 하지만 2010년 경인년(庚寅年)을 이틀 앞둔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사건도 수두룩하다. 특히 일부 사건의 경우 원인 조차 밝혀지지 않고 있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광주·전남 경찰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한 주요 사건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H교회의 50대 남성 둔기 피살(3월), 북구와 동구 주민센터 연쇄 절도(4월), 북구 H수련회 원장 살인미수(12월) 등이 꼽힌다. 지난 4월 발생한 남구 구동 보석공방 3인조 강도사건도 주범 1명은 여전히 검거되지 않고 있다.

또 영암 산림청 헬기 추락(11월)과 여수 향일암 화재(12월) 등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7월)은 피의자로 지목된 부녀(父女)의 진범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영암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 원인 규명 '현재 진행형'**=지난달 23일 영암군 삼호면에서 산림청 소속 '까모프'(KA-32T) 헬기 1대가 영암호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정조종사 박용규(52)씨와 부조종사 이중배(46)·이용상(42)씨 등 3명이 숨졌다.

국토해양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인양된 헬기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해 조사에 들어갔지만 정확한 사고원인을 가려내는데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H수련회 원장 살인미수**=12월에는 정신 수양을 위해 수련원에 모인 탤런트 등 원생들이 원장 살해를 기도하고 집단 성관계를 강요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 이 사건은 광주지검으로 송치돼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다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조작한 것인지 등 그동안 제기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주범 J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 5일 북구 용봉동 H수련원에서 청산가리와 양잿물을 탄 커피를 건네고 계단에서 밀어뜨리는 등 23회에 걸쳐 L원장을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향일암 화재 원인 '오리무중'**=해돋이 명소인 향일암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요 건물이 잿더미로 변했으나 정확한 화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0시24분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 대웅전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8동의 암자 건물 가운데 대웅전 등 3동이 전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경찰 등은 화재 직후 화재현장 감식과 시료채취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화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광주 북구 50대 남성 피살사건**=지난 3월 19일 북구 중흥동 H교회 화단에서 김모(50)씨가 둔기에 맞아 살해됐다. 경찰은 사건 초기 범행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화면에서 용의자 모습을 포착했으나 화질이 선명치 못해 인상착의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4월 4일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한 2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았으나 조사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석방됐다.

◇**동(洞) 주민센터 절도사건**=지난 4월 광주시내 동 주민센터에는 '절도의 공포'가 엄습했다. 8일부터 27일까지 북구와 동구에서 여섯 곳의 동 주민센터가 털렸다. 사라진 돈은 현금 10여만원이 전부였다. 범인은 방범창을 뚫고 들어가 보안시설이 작동되면 곧바로 도망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범행현장에 가위와 공구 등 증거품을 남겨두는 배짱도 보였다. 경찰은 증거품과 지문채취, 족적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광주지역 동 주민센터 보안시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복입고 따뜻한 겨울을" 광주시 새마을회원 등 30명이 30일 서구 광천동 U-스퀘어 광장에서 '겨울철 내복 입기 실천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의사들 처벌법 시행 후에도 '뒷돈'

광주지검, 8월 이후 리베이트 준 제약업체 10곳 넘어 … 처벌 '주목'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의사들 가운데 일부가 지난 8월 이른바 '리베이트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제약업계에 대한 처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는 광주지검의 수사 결과를 놓고 제약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향후 행보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전날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기독병원 의사 A(41)씨와 B(39)씨 등이 '리베이트' 관련 제재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후에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령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의약품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일 시행됐다.

A씨는 총 134건의 '리베이트' 수수 건수 가운데 8월 이후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7개 제약사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모두 580여만원을 받았다.

B씨도 총 82건 가운데 8월 이후 6차례에 걸쳐 2~3개 업체로부터 강의료와 회식비 등 명목으로 520여만원을 받는 등 전날 기소된 의사 10명 중 6명이 법 시행 이후 '뒷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부가 광주지검 수사를 토대로 제약회사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약값 인하'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광주지검 수사 결과 8월 이후에만 '리베이트'를 건넨 업체가 10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향후 당국의 제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보건부는 이들 제약회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지만, 제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검찰이 전날 의사들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을 '영업상 불가피한 관행'으로 간주해 입건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보건부가 검찰 수사 결과를 외면할 경우 자칫 '리베이트' 제재 법규가 '그림의 떡'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일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시인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도 복지부의 고민을 깊게 하고 있다.

보건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 결과를 놓고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례가 없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장성 전기업체 창고 불

7천여만 원 재산 피해

30일 새벽 2시40분께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모 전기업체 보관창고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해 창고 건물이 전소됐다. 이날 불로 창고 264㎡가 불에 타 7천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살인 부른 이장선거

완도서 낙선 40대 흉기 휘둘러 주민 1명 사망·1명 부상

마을 이장선거에서 낙선한 40대가 "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느냐"며 주민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주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지난 29일 오후 8시께 완도군 금일면 모 마을회관 마당에서 노모(49)씨가 흉기를 휘둘러 조모(50)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권모(55)씨가 중상을 입고 광주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권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이날 오후 7시께 치러진 이장선거 뒤, 자신을 노골적으로 반대한 조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마을회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조씨의 가슴을 2차례 찌르고 말리던 권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유권자 31명 가운데 당선자는 18표를 얻었으나 노씨는 12표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장 선거에서 떨어진데다 취기가 오른 노씨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노씨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해쳤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노씨를 사건 현장에서 붙잡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증심사 인근 주택 2채

광주시, 강제철거 집행

광주시는 30일 강제철거 방침에 반발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무등산 증심사 인근 노후 주택들에 대해 부분적인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해 동구 운림동 증심사 인근에서 주택 9채 중 2채의 내부 집기를 철거했다. 일부 주민들은 집행 과정에서 반발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시는 나머지 7채에 대해서는 겨울철임을 고려해 집행을 당분간 미루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내년부터 '직진 후 좌회전'

경찰청, 교통신호 순서 통일

내년부터 교차로에서 차량진행 방향을 알리는 교통신호 순서가 '직진 후 좌회전'으로 통일된다.

경찰청은 30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체계를 운영할 때 직진 신호를 먼저 주고 좌회전을 주는 방식으로 차례로 전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신호등 운영 교차로는 2만6천152곳으로, 신호체계를 보면 동시신호가 1만565곳(40.4%), 선행 좌회전 7천610곳(29%), 선행 직진 2천537곳(9.7%), 직좌(직진+좌회전) 후 직진이나 직진 후 직좌 등 기타 5천440곳(20.8%) 등이다.

경찰이 여러 가지 신호체계를 '직진 후 좌회전'으로 통일하는 것은 전체 교통량의 70% 이상인 직진 차량에 신호를 먼저 부여하는 것과 동시신호를 직진과 좌회전으로 분리하는 것이 소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주차선 물렸다" 차량 수십㎝ 긁어

쌍나팔

○…'주차선을 지키지 않는다'며 자동차 열쇠로 이웃의 차량 2대를 긁은 30대 공기업 직원이 경찰에 입건.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공기업 직원 이모(34)씨는 지난 10월 6일 밤 광산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A(39)씨의 산타페 승용차 뒷부분 수십㎝를 긁고 10일 뒤에는 B(40)씨의 소렌토 차량 앞뒤 문을 마구 긁어놓았다가 지난 18일 경찰에 덜미를 잡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

○…경찰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끝에 이씨를 붙잡았는데, 이씨는 경찰에서 "주차구역 안에 딱 맞게끔 주차를 해야하는데 이들 차량은 선을 지키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